

광주 첫 국비 3조원 시대 열어... 호남고속철 송정~목포 200억 배정

국회 통과 광주·전남 새해 예산안

광주천 복원 등 대통령 공약사업 줄줄이 미반영 전남 4조8천억...광주~완도 고속도 100억 반영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광주시와 전남도의 국비지원 예산이 각각 3조 1573억원과 4조798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광주~완도간 고속도로(50억원), 영광 한빛원전 대피로 건설(5억원) 등 19개 사업, 240억원이 신규 사업비로 책정되고 호남고속철 송정~목포 건설에 200억원이 배정되는 등 정부 예산안에 빠졌던 730여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특히 올해 신규 반영된 19개 사업의 경우 향후 총 사업비가 1조7536억원에 달한다.

◇광주 전년대비6392억 증가=광주시는 첫 국비 3조원 시대를 열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31일 본회의를 열어 광주시 국비지원 예산 3조1573억원 등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예초 정부 예산안(3조1024억원)보다 549억원 늘어난 것이고, 전년(2조5181억원)보다 25.3%인 6392억원이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다. 신규사업은 47건 739억원, 계속사업은 107건 3조834억원이다.

하지만, 광주시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및 증액사업비 4023억원 중 549억원을 제외한 3474억원이 미반영돼 아쉬움을 남겼다. 올해 국비 반영 주요 사업은 자동

차 100만대 생산도시 구축(10억원), 치과용 기술부품지원센터 구축(10억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52억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10억원), 광주평동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5억원), 광주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건립(16억원), 동광주IC~광산IC 고속도로 확충(39억원) 등이다.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운영비는 105억원이 늘어난 257억원이 반영됐으나, U대회 시설 확충비는 시 요구액 708억원 중 562억원만 확정돼 대회시설 구축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무등산 국립공원 관리 예산은 예초 69억원에서 32억원이 늘어난 101억원이 확정됐으며, 국립광주과학관 운영비도 2억원이 증액된 41억원이 반영됐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은 50억원이 늘어난 100억원이, 호남고속철도 건설도 200억원이 증액된 1조1477억원이 확정됐다.

반면 사업 자체가 아예 탈락한 경우도 많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광주시가 끈질기게 요구해 온 광주천(양동복개상) 생태하천 복원사업(30억원)을 비롯한 영·호남 고속철도 연결사업인 광주~순천 경전선 전철화(48억원)는 예산이 전

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 한국전기전원 국원 광주분원 설립(10억원), 광주 R&D특구 연결도로(60억원), 용두~담양 대전간 도로 확장(20억원), 지산유원지 오감한옥마을 조성(10억원), 5·18기념공원(애꾸눈 광대) 상설화(3억원) 등의 사업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전남 지난해보다 6223억 늘어=전남도의 2014년 국고사업비는 호남고속철 송정~목포 건설 사업에 200억원이 배정되는 등 총 4조7989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6223억원(14.9%)이 늘어난 규모다.

이 지역 현안 사업 중 하나인 호남고속철 송정~목포 건설과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확보 예산은 각각 400억과 100억원이다.

이에 따라 호남고속철도 1단계 구간인 오송~송정 구간이 2014년 말까지 마무리되고 이어 2단계 구간인 송정~목포 구간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SOC의 경우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15억, 한빛원전 비상대피도로(법성~홍농) 개설 5억원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됐고 영암·해남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도 50억원 반영됐다. 이 밖에 압해~압대 간 새천년대교건설 450억,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건설 860억원이 반영돼 국제적 수준의 해양관광자원 개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국립 호남생물자원관 건립 관련 예산도 30억원 포함됐고, 2014 완도 경전선 전철화(48억원)는 예산이 전



밤샘 국회 피곤한 의원들

새해 첫 국회 본회의가 열린 1일 새벽 회의가 정회되자 의원들이 휴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과 후방산업으로 연계할 여수 신북항 건설 89억원, 박람회장 상시 개장 88억원도 반영됐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반영된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사업(40억원)에 이어 자동차튜닝산업 기반 구축사업(12억원)이 신규로 반영돼 전남이 F1경주장을 활용한 자동차산업 고도화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

산조정소위 위원인 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세계적인 경기 둔화를 반영한 정부의 신규 사업 투자 자제 방침에도,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해왔다"며 "특히 내년도 광주·전남지역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의 경우 향후 총 사업비가 1조7536억원에 달하는 만큼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米 = 十八만八천원

쌀 80kg당 목표가격 국회 통과... 5년간 적용

현행 80kg당 17만838원인 쌀 목표가격을 18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또 고정직불금을 현행 ha당 80만원에서 올 90만원, 2015년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겨울철 논에 보리 등 이모작 작물 재배 시 ha당 40만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농지매매 및 교환 등에 필요한 농지자금 대출 시 현행 적용하는 금리 2%를 1%를 낮추도록 했다.

오다 지난해 연말 절충안인 18만8000원에 합의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록 의원은 "당초 민주당이 제시한 쌀 목표가격을 관찰하기 위해 7개월간 협상을 진행하면서 국정감사 과정, 철야농성 등 모든 노력을 강구했으나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고 말았다"며 "많은 농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18만8000원에 합의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243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찬성 211표, 반대 7표, 기권 25표로 가결 처리됐다. 이 목표가격은 2013년산부터 5년간 적용된다.

따라서 내년부터 쌀 농가는 쌀 한 가마니(80kg)의 산지 쌀값이 18만 8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정부로부터 차액의 85%를 보전받을 수 있다.

목표가격은 2005년부터 8년 동안 17만838원으로 동결됐으며, 정부는 2013~2017년 쌀 목표가격을 17만 9686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19만6000원의 수정안을 제시하며 정부·여당과 대립해

그는 이어 "합의된 쌀 목표가격이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이번 인상으로 인해 연간 약 9585억원의 농업소득 향상은 물론 고정직불금 인상에 따른 1720억원 추가 지급, 겨울철 이모작 906억원 신규 지급, 농지자금 대출금리 연간 180억원 절감 등 총 1조 2000억원이 넘는 농가소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회원 30여명은 정치권의 쌀 목표가격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지난 30일부터 광주·전남 일부 민주당 지역구 의원 사무실을 점거, 농성을 벌이다가 31일 오후 해산했다. /박지경기자jzpark@kwangju.co.kr

"24시간도 부족해"... 고비마다 주고받고 '땅땅땅'

외측법·끼워넣기에 진통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여야의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합의로 순항할듯했으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측법) 개정안과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라는 돌발변수를 만나면서 본회의가 개표된 지 24시간 30여 분만인 1일 오전 10시30분에 모든 안건 처리를 마무리했다.

첫번째 고비는 전날 오후 민주당 내에서 '원내 지도부가 외측법을 국정원 개혁안 처리와 맞바꾼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나타났다. 특히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사위의 박영선 위원장이 "이 법만큼은 내 손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버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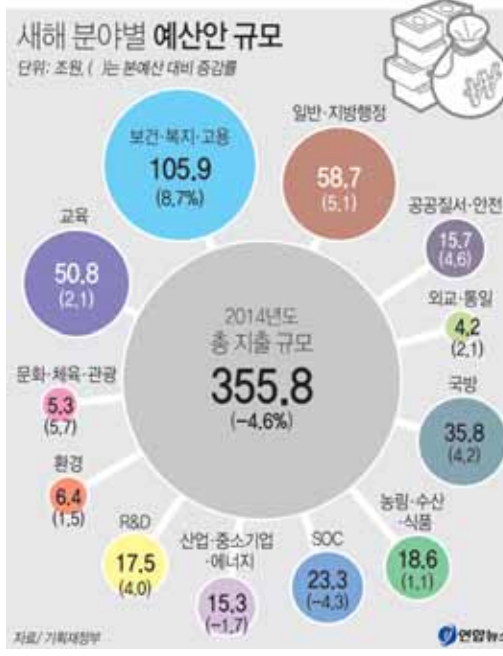
이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박 위원장을 설득하는 한편 여야 법사위원들과 지도부 간 채널을 가동,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등 검찰 개혁법의 2월 국회 처리 합의를 끌어내 이날 오전 3시35분께 법사위에서 외측법이 통과됐다.

이어 3시50분께 시작된 본회의에서는 국정원 개혁법안과 예산안 및 부수법안들이 일사천리로 처리됐으나 여권 실세인 최경환 원내대표의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은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으로 250억원이 편성된 정부안이 국회를 거쳐 130억원이 증액되면서 비롯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새벽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신규사업으로 새 비목(費目)을 설치하려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은 국토교통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서 '법안 증액'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기존 사업인 80억원에 50억원의 재원을 보태 총 130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최 원내대표의 지역구와 관련된 신규사업인 '대구지하철1호선 하양 연장' 예산은 국토위의 '반대'로 아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반영된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은 2009년부터 진행된 별개의 사업으로 상임위 동의를



소속 주승용 국토위원장이 지역구 예산 5개와 바꾸자고 했다"며 "(최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할 수 없어 신규예산 반영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표는 "주 위원장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문제의 예산을 '계속사업'이라는 논리를 들어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은 여권 실세의 지역예산 챙기기"라고 반박했다.

논란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공식 사과하는 선에서 정리됐고, 본회의는 다시 속개돼 외측법 등 남은 법안을 처리했다. /박지경기자jzpark@kwangju.co.kr



www.ghu.ac.kr

믿음으로 승리하는 대학

High five in GHU



2014학년도

광주보건대학교 신입생모집

- 정시 1 차 2013. 12. 23(월) ~ 2014. 1. 10(금)
- 정시 2 차 2014. 1. 23(목) ~ 2. 4(화)
- 정시 3 차 2014. 2. 14(금) ~ 2. 20(목)
- 입학상담 (062)958-7511~4
- 입학상담문자서비스 1661-7514



4년제 학과 | 간호학과

3년제 학과 | 임상병리과 | 치위생과 | 물리치료과 | 방사선과 | 치기공과 | 안경광학과 | 응급구조과 | 보건행정과 | 병원전산관리과 | 유아교육과

2년제 학과 | 식품영양과 | 사회복지과 | 피부미용과



광주보건대학교